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71.95	↑ 코스닥	686.12
	(+2.88)		(-3.43)
↓ 금리 (미국 9년)	2.889	↓ 환율 (원-달러)	1392.35
	(-0.026)		(-2.85)

AI 융합, XR의 진화 136조 시장선점 가속

〈2026년〉

AI가 그리는 초연결 미래
〈下〉 확장현실

AI(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확장현실(XR)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현재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향후 제조, 국방 등까지 확장될 것이라 분석이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XR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도 늦으면 내년 안으로 첫 XR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XR 기기 활용' 이미지.

그간 XR 시장은 정체기를 맞았지만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며 현실화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애플의 XR기기가인 '비전프로'가 출시된 데 이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XR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마크 저커버그 글로벌 빅테크 메타(Meta)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2박3일 동안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 기업들과 미래 사업에 대해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타와 함께 XR 기기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재용 회장은 저커버그와 만난 회동을 하면서 AI 반도체와 함께 XR 기기 개발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저커버그는 2022년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를 찾아 한중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을 만났다. 당시 저커버그는 XR·VR 기기 개발, 제작 등에 대해 양사 간 협력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등 생성형 AI 시장을 개척 중인 만큼 메타와 AI 활용 비중을 높인 XR 기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함께 XR 기기를 개발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첫 XR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상출집단 TRS 악용 편법보증 막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익스와프〉

공정위, 탈법행위 고시 제정 추진
계열사 간 부실화 방지 위한 규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출집단 적용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공정

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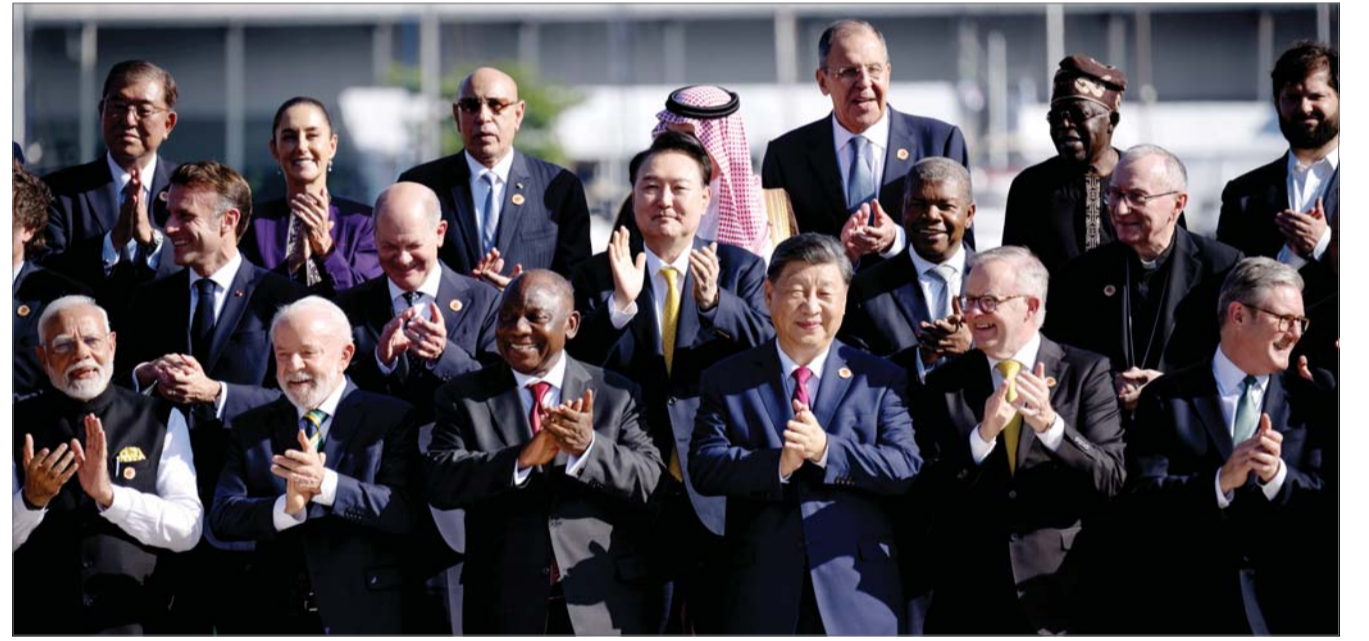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하는 보증이 금지되고 있다.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3개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尹 대통령, G20 정상들과 기념촬영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HP) 출범'에 참여한 시진핑(맨 앞줄 왼쪽 네번째) 중국 국가주석, 의장국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맨 앞줄 왼쪽 두번째) 대통령 등 G20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

연금개혁 '공회전'... '개혁 대신 폐지' 주장도

22대 국회 첫 정기회의 내달 종료
연금폐지론 찬성 응답자 31% 달해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우선 완수하기로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2월 초 종료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의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해 연내에 개혁을 완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대립이 최고조여서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연금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정부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금개혁 논의가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달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0조원의 국민연금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천천히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가 31.3%였다. 반대는 54%였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방차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 홍준표, 한동훈 겨냥 "계시판에 가족 동원 됐다면 대표자 처벌해야" /사진 뉴스

▲ TK에서尹대통령 퇴진 촉구 이어져... 민주당 "들불로 번질 것"
▲ 민주 "감사원 사드 수사외"에 "근거 없는 전정부 정치보복"



▲ 배식봉사나선한 총리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에 "더 잘하겠다" /사진 뉴스
▲ '尹퇴진 집회' 연결될 수능 지문 도메인... "앞으로 사전구매 후 출제 검토"